

투데이 칼럼

5·18 왜곡 '안될말'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달리 볼 수가 없다.”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 한마디를 대통령의 입을 통해 듣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당연함을 지키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닌가. 여전히 자기 개인감정이 앞서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당연함을 지키는 방향으로 다들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극히 당연한 지금의 이 시간을 다시 잃게 된다면, 그걸 되찾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작심하고 몇마디해야겠다. 전쟁은 '전시'라는 명분 하에 모든 것이 용인된다는 특성이 있다. 5.18은 신군부와 투입된 병사들에게 있어서 '전시 상황'으로 인식되는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길에서 마주하는 시민들을 나이 불문하고 적으로 인식해서 사살하는 게 용납되었던 것이다. 저들에게 있어서 1980년 5월 18일의 광주 시민들은 자국 국민이 아니라 '적'이었다.



박보경 칼럼니스트

저들에게 전쟁이었기에 죄의식이 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전쟁이었기에 자신들의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그게 전두환씨를 위시한 당시 신군부의 입장이었다. 가끔 당시 투입되었던 군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게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곤 하는데, 당시 광주에 대한 진압군의 인식을 '시위 진압'이 아니라 '전쟁터'로 개념을 바꿔 보면 충분히 답이 나온다.

과한 해석이 아니다. 기사에도 나온다. 시민들을 구조하려던 인터뷰이를 건부 하나가 끌고 가서 '여긴 전쟁터'라고 욕박지르는 내용이 있

다. 이 기사 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참상을 증언하는 진압군 측 증언자들 대부분의 입에서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들에게 광주는 전쟁터라는 인식을 심어준 사람들, 그게 신군부 지도자들이다. 이게 우리가 5.18을 잊어서 안되는 이유고, 전두환씨를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이유다.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건 역사적인 진실이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이스라엘 등은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할 경우 처벌한다고 한다.

우리의 5.18도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왜 39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야하고 그유족과 희생자들이 국회까지 찾아와 그들의 아픔을 다시금 되새기며 마음의 피를 토하게 하는가!

5.18 이후 광주의 피해자들은 빨갱이로 몰릴까봐서 그게 너무 두려워서... 가장 치열하게 투쟁했던 시민 2명을 간첩으로 신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 얘기가 너무 가슴이 아팠다. 엄혹한 그 시절이 그 사람들을 그친구들을 버리게 했다.

그랬었던 그들에게... 5.18을 왜곡하는게 사람이 할 짓인가? 이런 절대로 사상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감쌀 수준을 넘어섰고 매우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지금 토론의 장이 필요한게 아니고 법을 더 강화해서 왜곡하는 그자들을 엄벌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와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마무리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할 뿐이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된다. 절대!

사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앞날 기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울려온 소식이 있다. 풀무원 식품과 프롤바이오가 23일 24일 공장 준공식을 마치고 생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정말이지 들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정현을 익산시장과 이춘석 의원과 조배숙 의원 그리고 윤태진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이사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고 또 축하한다는 데 매우 뜻깊은 일이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관계자들에게 할 말이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점점 그 위용을 갖추어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도민들이 본래 기대했던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저번에 보도된 뉴스를 심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일반 산업단지 수준으로 전락할 위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도 그러한지 궁금하다. 이제 걱정할 단계에서 벗어났다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다면 전북도와 익산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시민들만

의 것이 아니다. 도민들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전북 발전 현안 중에 그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그 위용을 온전히 드러내게 되면 익산시의 도내 농가들은 그만큼 발전돼 있을 게 틀림이 없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사업을 위해서 더 많이 생각을 보태야 하고 더 많이 마음을 써야만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이유가 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미래를 위해서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아직도 깨끗한 이미지의와는 거리가 있다. 왕궁은 새만금 사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변모해야 하지만 식품 클러스터의 미래를 위해서도 변모해야만 한다. 혐오 시설을 그대로 두고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많이 안된다.

먹거리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먼저 익산이 청정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뚜렷해야 한다. 전북도와 익산시의 능력 발휘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미래는 결정된다. 그 능력발휘는 빠르고 힘차도록 좋다.

독자제언

불법 주·정차 근절로 교통안전 앞장서자

소방출동로상의 큰 장애물이자 소방관들의 현장접근을 방해하여 소중한 생명살리기를 놓치게 했던 불법 주정차 차량들, 이제는 더욱 긴장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30일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이 주차금지 구역으로 변경됐고, 시행 규칙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도로 경계석과 차선은 붉은색으로 표시된다. 해당 장소에 불법 주 정차를 한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정도 인상된다. 다만

적색표시 설치와 홍보 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범칙금 인상은 3개월 간 유예 기간을 거쳐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와 범칙금은 각각 4만원이다.

불법 주정차량 운전자들은 잠깐이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긴급자동차 출동 시간 지연 등 인적·물적 피해는 급증한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나부터 지키자' 라는 슬선수범 자세로 교통안전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백옥셀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브렉시트 예정대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런던 하원에서 매주 수요일 열리는 '총리 질문응답' (Prime Minister's Questions)에 출석해 연설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24일 EU 탈퇴 협정 법안을 내고 6월 첫째 주에는 EU 탈퇴 협정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하원의 지지를 촉구했다.

특례시와 금융중심도시 지정 쌍끌이 도모

지역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되어왔다. 이 말은 전북도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다.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도 주는 말이다. 요즘 같은 때는 특별히 전주시 쪽에 무게가 실린 담부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는 이번엔 반드시 특례시가 되어야 한다.제3금융중심도시 지정도 조속히 받아내야만 한다. 최근에 전주의 특례시 지정이 최고의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지역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지는 당부이다.

지역 발전은 전북도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다. 전주시도 지역 발전을 이끄는데 큰 몫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다. 도민들에게는 지역 발전이 열원이 되고 있다. 지역 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되어 하는 이유이다. 우리 지역은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너무 낙후돼 있다. 도지사를 비롯해 전주시장은 물론이고 전북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꼭 넓게 뛰어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전북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오래도록 도전을 받고 있는데 더 힘내야 한다. 전주의 특례시 지정이 난관인데 더 힘내야 한다.전북도와 전주시는 희망의 근거가 돼야만 한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 지금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지역의 발전을 결심하는 이들은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겠다.그리고 도민과 함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는 저력을 보여야 한다. 특례시와 금융도시의 쌍끌이 성공으로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어쩌면 지금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최고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여기 다시 당부하거나 전북도나 전주시는 희망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쌍두마차라 되어야 한다. 전북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부산과 한판 승부를 벌일 각오를 다져야 한다. 전주시도 그렇다. 100만 이상의 도시만 특례시 자격을 준다면 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 방침은 무위로 돌아간다. 전주시는 그것을 역설해야 한다. 경기도 지역은 100만이 넘는 특례시 후보 도시들이 수도룩한데 비해 우리 전북의 경우는 그게 아니다. 특례시 지정은 명칭 그대로 전주가 적격이 아닐 수 없다.

Large graphic advertisement for Jeonju Maeil newspaper. It features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sailboat on the sea with a sun or moon in the background. The text includes the slogan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humanity that provides courage and hope) and a quote: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 (A better newspaper, a newspaper loved more, a newspaper with readers). It also lists the newspaper's commitment to providing accurate news and supporting local development through its network.